



보도시점 2023. 7. 10.(월) 16:00 배포 2023. 7. 10.(월) 14:00

##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추진 등 협의 -
- 고액 중복 가입 시 인수심사 강화 및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위원회는 ‘23.7.10.(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①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②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23년 3분기).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예: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하여 보험금 중복수령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19.1월 ~ '23.1월)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유형 :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2,910건(29.4%),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등.

위반유형 :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

셋째,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였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되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동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2-2100-2967)
<공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아 (044-202-2667)
<공동>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김종민 (02-3150-2037)
		담당자	계 장	김현수 (02-3150-2168)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문형진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김성환 (02-3145-7474)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책임자	실 장	조정석 (02-3145-8730)
		담당자	팀 장	김정운 (02-3145-8888)
<공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관리부	책임자	실 장	김문수 (033-736-4400)
		담당자	팀 장	류옥현 (033-736-4461)
<공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책임자	부 장	송민경 (033-739-5450)
		담당자	팀 장	정연자 (033-739-5451)
<공동>	근로복지공단 구상관리부	책임자	부 장	전상현 (052-704-7451)
		담당자	팀 장	정원탁 (052-704-7453)
<공동>	국민연금공단 연금조사부	책임자	부 장	신 철 (063-713-5890)
		담당자	차 장	배진희 (063-713-5897)
<공동>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책임자	부 장	김희경 (02-2262-6658)
		담당자	팀 장	최재춘 (02-2262-6659)
<공동>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책임자	부 장	박승호 (02-3702-8584)
		담당자	팀 장	이용섭 (02-3702-8650)
<공동>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부문	책임자	부문장	정근환 (02-368-4362)
		담당자	팀 장	이용길 (02-368-4342)
<공동>	한국신용정보원 보험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김진섭 (02-3705-5851)
		담당자	팀 장	우정수 (02-3705-5862)

##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 1. 개요

- 고액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은해 사건\*) 등으로 무리한 중복·과다 보험가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 대두

\* 남편(피보험자)을 사망보험에 중복 가입시킨 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상고)

-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중복·과다보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신용정보원, 생보협회, 손보협회로, '22.4월 구성

\*\* 그 외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 계약정보 변경시 본인확인, 고액 타인사망 담보 확인의무 강화 등은 금감원 보험사기예방 모범기준에 반영('23.5월)

- 다만, 인수심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보험사 자율사항이며, 획일적인 가입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 단순 재정검증 적용시 부유한 사람만 가입되는 등 취약계층 역차별 발생 가능

- 보험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 (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만 인수심사 원칙을 마련

### 2. 주요내용

#### 1 특별인수심사 도입 : 생명보험·장기보험

- (현행) 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사가입금액, 소득재산 등 재정심사를 실시하나
- 회사별 기준이 상이하고,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 타사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다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

□ (개선)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그 외는 자체 인수심사(자율)를 진행

-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 대상: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  
② 사망보장을 쏘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

※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

-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하여 대상확대 검토
-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 개인 동의하에 CB·신용정보원의 전산조회를 통해 청약서 임의기재, 서류 위변조 등 허위정보 우려 제거

## 2 여행자보험 정보집중·확인시스템 도입(신용정보원)

□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여행자 보험 계약정보 집중시스템을 신규 도입

-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

## 3. 향후 추진 일정

- ① 생·손보험회는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는 내규 반영(3분기)
- ② 신정원은 해외여행자 정보집중시스템 도입 등(하반기)